

특별보고서(2006. 9. 20)

아베 내각 출범 이후, 한일관계 전망

이 자료는 9월 26일 새롭게 출범하는 아베 내각은 현재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 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바, 아베 신정권 이후 한일관계를 전망하고,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



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

아베 내각 출범 이후, 한일관계 전망

※ 본 보고서는 김호섭 교수(중앙대), 이면우 박사(세종연구소) 등 일본정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을 기초로 여의도연구소 연구진의 연구검토를 통해 작성된 것임

아베신조(安倍晋三), 그는 누구인가?

■ 개인적 배경

○ 아베의 약력

- 생년월일 : 1954년 9월 21일
- 본적지 : 일본 야마구치현 오오츠군
- 출신교 : 세이케이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(1977년)
졸업후,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 수학
- 당선횟수 : 5선

○ 기시 노부스케 前수상의 외손자이며, 아베 前외상의 둘째 아들로서 보수적이며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가족의 전통을 물려받음

○ 부친인 아베 前외상이나 기시 前수상이 친한과였던 것처럼 아베 역시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한국 인사들과의 교류를 고이즈미 수상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

■ 정치적 배경

○ 아베는 부친 사망 이후 그 지지기반을 물려받아 1993년 첫 당선 이후 현재 5선의원으로로서 당선횟수로 볼 때 장관직 임명을 대기할 정도의 정치 경력임

- 통상적으로 일본의 경우 6선급 의원이 장관직에 임명되어 왔음
- 비교적 선수가 적은 아베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기가 다른 후보자들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임
 -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인사의 총리 취임은 이후 정치일정 속에서 민주당과의 선거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됨
- 아베 총리 후보자가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강경자세였음은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

내년 7월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 향방의 전기점

-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동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아베 내각의 정책방향의 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
- 우선 아베 내각은 7월까지의 선거에서의 승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국내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
 - 일본 국민의 주된 관심 사항은 경기진작, 사회복지문제, 소비세 인상 문제 등임
- 아베 내각이 강력하게 피력할 대외정책 이슈로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대북정책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, 이는 아베의 국민적 지지의 기반이 대북강경정책이었기 때문임
- 반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핵심 쟁점이었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여 선거를 앞둔 아베 내각이 크게 부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
아베 내각의 대외정책 전망

■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자위권 보유 문제

- 아베는 헌법 개정에 대해 “이미 자민당은 헌법 초안을 만들었으며, 차기 리더는 이 신헌법(제정)을 정치일정에 반영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”고 언급한 바 있음
- 아베 내각은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자위권 보유 문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, 향후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음
- 그러나 집단자위권 보유를 위한 헌법 개정은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, 아베 내각이 이 문제를 완결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 -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하며, 그 후 각당의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통일안을 마련해야 하는 바,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2-3년이 필요함
- 따라서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문제를 개헌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헌법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
 -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각 法制局과 공명당 등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움
 - 특히 정치 일정상 집단자위권 문제는 내년 7월 선거 이후 아베 내각이 좀더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
- 결국 아베 내각도 보통국가화의 핵심 사안인 집단자위권 보유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보다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 상황 등 현실을 추후 법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

■ 양국 쟁점 사안(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독도 문제)

- 아베 총리 후보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바, 이는 고이즈미 총리처럼 선거 공약으로 인해 실천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
-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일정상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사참배 문제를 집권 초기부터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
- 독도 문제 등 한일관계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베 총리 후보자는 국내 정치적 입장 보다는 ‘외교적으로 관리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음
 - 아베 후보자는 자민당 총재 출마 표명시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 중국과 한국 등 근린제국과의 신뢰관계 강화를 언급한 바 있어,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,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중국,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
- 아베 내각은 신사참배 문제, 독도문제 등으로 불편했던 중국,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, 이 문제를 ‘외교적으로 관리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

■ 북한 문제

-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 중 가장 명확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북한 문제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, 아베 총리 후보자는 대북강경정책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바 있음
 - 2002년 9월 고이즈미 방북 당시 관방부장관으로서 수행하며, 납치에 대한 김정일의 사과 요구 입장 관철

- 2002년 10월 납치 피해자 일본 귀국시 북한 귀환 적극 저지
 -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적극 추진
- 아베 총리 후보자는 9월 18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 취임후 새 내각에 납치문제 담당 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
- 일본 정부는 9월 19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(WMD)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을 각료회의를 통해 의결했음

■ 일·중 관계

- 일·중 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, 과거사 문제로 악화 일로에 있었으나,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- 최근 일본의 경기 침체 극복이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책의 성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,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존재함
- 이는 일·중 관계를 단순도식으로 해석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으며 중첩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결국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앞으로도 보일 것이지만,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관

계를 고려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, 향후 아베 내각이 외교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구사할 경우 일·중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

정책적 고려 사항

■ 내년 7월까지가 한·일관계 회복의 적기

- 내년 7월까지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, 아베 내각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정책에 있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- 그러나 7월의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이 승리를 거둘 경우, 아베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해 보다 국가주의적인 태도로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따라서 한국은 내년 7월 이전에 최악의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고 후일에 있을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 나가는 조치들이 절실함

■ 일·중관계 회복에 대응필요

-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일본의 투자와 동북아 안정 기조의 필요성으로 구동존이(求同存異)의 자세를 보이고, 일본 또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할 경우, 중·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
-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, 아베 내각이 해당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적 관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, 중·일관계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
-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미국·일본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일·중관계 회복으로 동북아에서 그야말로 ‘외톨이’가 될 수 있는 바, 보다 정교한 외교전략 수립이 절실함

■ 정부·여당의 반일 감정 정치적 이용 경계

-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, 아베 내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,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관계 악화와 더불어 한일관계 또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
 -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악화 원인이 신사참배, 독도 문제 등 국내 문제였다면, 이후 대북 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등장하는 것임
- 이에 대해 정부·여당이 지금까지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던 민족공조 논리를 일본에도 적용하여 반일 감정을 확산시켜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됨
-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핵심 사안인 북한 핵·미사일 문제,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·미·일 공조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

여의도연구소

* 작성 : 연구위원 이인배